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천국인가?

복지수요·일자리 등 맞물려 '매머드화'

지방공직자 1만2000명... 제조업 등 광공업 수준 경찰·교육공무원 등 국가직 포함시 사실상 '산업' 업무량 늘며 증원 불가... 취업 등 명분 손 못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증원이 도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공무원정원을 현 6005명에서 102명을 늘려 6107명으로 확대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안전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오히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도내 출자 출연기관 직원과 공무원까지 합치면 1만1000명이 넘는다. 이리니 도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이라

는 지역여론을 전달했다.

올 4월 11일 현재 제주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5명이며, 여기에 3000명에 육박하는 공무원 (2938명)과 청원경찰까지 합하면 9211명이다. 2006년 7월 1일 특별도 출범 당시 지방공무원은 5169명이었으며, 공무원 763명 등을 포함시 6202명이었다. 16개 공기업 출연기관 등을 감안하면 1만2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 5월 기준 제주지역 제조업 (1만 1000명) 등 광공업 종사자 수와 비슷 한 수준이기도 하다. 지방공무원만 해도 1개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1년 결산에 대비 2017년 공무원 인건비로 5042억원을 쓰고 있어 전국 1위 (14년 14.85%, 15년 14.41%, 16년 13.17%, 17년 12.24

%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평균은 2014년 10.08%~2017년 9.28%였다. 여기에 국가경찰과 해양경찰·교육 공무원 등까지 보태면 제주는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별도 출범이후 최근 12년간 13만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관광객수도 연평균 8.9% 늘었기 때문이다. 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04%로 전국의 1.7배 수준을 보였다. 중앙이양사무 건수도 2015년말 기준으로 4537건이 된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건수와 건축허가 건수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그러나 "너무 많다"는 여론이 비등한게 현실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국평균 204명인데 제주도는 120명, 공무원직을 포함하면 주민상대수는 전국평균 180명, 제주도는 85명이다. 특히 공무원 비율은 전국평균 13%인데 제주도는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상 공직이 산업이 된 만

큼 취업 등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의 증원 추세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실시한 제3회 지방공무원 시험 (8·9급)에는 413명을 뽑는데 3424명이 지원하며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 시도와 달리 취업문호가 넓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명환 도의원은 "도청은 사업부서를 축소하고 과단위 규모의 기획조정업무와 꼭 필요한 통합국단위 광역사무만 한정해야 한다. 나머지 사업부서는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넘겨야 정상적인 삼각형 조직이 될 것"이라며 정책수립부터 집행까지의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넘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 이양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의 업무량이 늘면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오는 11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상윤기자

내년 예산편성 도민 의견 수렴

도, 8월 4일까지 설문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8월 4일까지 2020년도 재정운영 방향 설정 및 예산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 ▷재정 운용 방향 ▷역점 투자 및 축소 투자 분야 ▷재정여건 개선 방안 ▷일반 행정, 안전, 교육, 문화 등 12개 분야 최우선 투자부문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조사 (사전 동의자), 제주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소통/참여' 코너 접속 설문조사, 행정기관 민원실(도

청, 시청 및 읍·면·동) 현장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도는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 더 많은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설문조사에 모바일 투표방식(엠보팅)을 도입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예산편성에 바란다' 제안코너를 개설해 도민불편 해소, 경제·산업 육성 등 전 분야에서 행정이 놓치고 있는 사항과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실효성과 타당성, 파급효과를 검토한 후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분석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2020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된다. 오은지기자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기준 만든다

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마무리 따라 수정·보완 후 오는 9월 조례개정안 도의회 제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최근 제주자치도의회에서 평가지표와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용역결과를 수정·보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도, 무료 수질검사·상담 운영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윤권)는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이 안전한지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돗물을 채취하고 탁도·색도·잔류염소 등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온라인(환경부 물사랑 홈페이지 https://ilovewater.or.kr) 또는 전화(064-750-786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윤기자



마른장마... 애타는 농심(農心) 장마로 접어들었지만 비다운 비는 좀처럼 내리질 않고 있다. 7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취나물 밭에 스프링롤러를 이용해 물을 주며 발을 하고 있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2019 세계자연유산제주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개최를 축하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차고지증명제가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중·대형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중·대형 전기차 포함) 시행됩니다. (단,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상차종	차량분류기준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길이 9m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m 이상
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제중저공해자동차	2019. 7. 1일부터 중·대형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단, 소형제한 차량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자동차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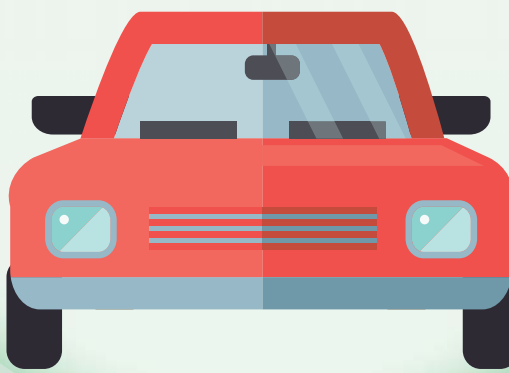


차고지증명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세요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기준일 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 (시행기준일: 대형차 - 2007년 2월 1일, 중형차 - 2017년 1월 1일)

문의: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3234)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